

“용담댐 수해피해 배상 납득 어렵다” 달라진 지방보조금 제도 홍보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 피해주민에 행정력 지원 당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이 용담댐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무주군이 피해주민에게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이 용담댐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무주군이 피해주민에게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조정결과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 촉구' 5분 발언을 하고 피해주민 289명 중 250명만 배상을 받고 배상금도 64%만 인정되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한 피해발생은 명백한 인재인데 정부에서는 하천구역과 홍수구역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배상일부를 전복도와 무주군에 떠넘겼다”며 배상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따라 댐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며 행정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송열 의원은 이어 무주군이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의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배상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할 경우 무주군이 행정적·법적 조력을 하는 등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신청금액 83억7100만 원 가운데 45억 3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9억900만 원만 조정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다 피해를 입은 39명, 11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불가로 조정종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관리체계 강화·부정수급 예방·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

진안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 시행(2021.7.13.)과 지방자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2021.12.15.)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달라진 지방보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은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아야하며,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처벌이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시 해당 보조금 환수와 교부 제한에 그쳤으나,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과 더불어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된다.

또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군

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수급 감시를 위해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60일 이내에 교부결정 취소금액 등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부정수급자는 진안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도 배제되게 된다.

거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 취득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현황을 매년 6월, 12월 요 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 의무화되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됐다.

진안군은 보조금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사후 제재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부서 및 사업부서 등과 협력해 새롭게 신설된 지방보조금 제도를 관련 단체,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적극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봄철 산불 방지 최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장수군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산불방지를 위해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분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 비상근무를 통해 원일 별 맞춤형 사전

대책 수립과 산불 경보 발령 시 조치 사항 이행에 주력한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등 44명을 선발해 봄철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숲길과 산불취약지역의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군은 봄철 산불방지 기간 동안 무분별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입산자 실화 등 산불 주원인 차단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예방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인위적 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봄철을 맞아 주말 등산, 캠핑등으로 입산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영농을 위한 논·밭 소각 행위 등을 자제해 주시고, 산불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 감시, 신속한 초동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이 5년 동안 3억 원(연간 6천만 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올해 신규 2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정책이다.

무주군에서는 농업법인 (유)소호팜 하우스(대표 선수진), 농업법인 (주)파머스프렌즈(대표 김동영)가 신규 선정돼 올해부터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기존 사회적농장으로 활동 중인 반햇소영농조합법인과 소호팜하우스, 파머스프렌즈 총 3개소의 사회적농장이 사회적 약자들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호팜하우스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머스프렌즈는 예비 청년농업인 및 초기 청년농업인과 함께 하며 사회적 약자가 무주군에 무사히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미생물 농가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진안군이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농가에 무상으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농가 등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세부적인 공급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 단체 등이며, 제공 미생물은 EM(복합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 등 총 8종류다.

농업용 미생물은 EM, 클로렐라, 광합성균, 축산용으로는 EM,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을 공급한다. 또한 인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인삼 뿌리썩음병 방제용 미생물 2종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더불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농가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제작해 용도별로 적합한 미생물 사용과 적정 희석배수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마을 세무사 위촉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장수군이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제1기부터 함께한 남원시 소재의 이춘연 세무사(윤경세무회계사무소)와 전주시 소재의 김태곤 세무사(김태곤세무회계사무소)가 제4기 장수군 마을세무사로 활동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장수군 홈페이지(종합민원→지방세안내)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장수군은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포스터 및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진안군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월 8일~21일까지 202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접수, 교육장 입장 전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총 12과정(수박, 고추, 고구마, 흑염소, 포도 등) 11회로 편성됐으며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 1일 공익직불제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개강식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모든 농업인 교육의 시작이자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경영을 위한 한해 농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첫 과정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달라진 농정시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해 농사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